

국민행복시대, 행복한 근로자는 안전과 보건의 균형 잡힌 양 날개로



을지대학교 간호대학 / 김숙영

새로운 정부가 열렸다.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전과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하게 하고, 그래서 설렘과 긴장감을 선물한다. 대한민국 최초 여성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어떠한 정책을 제시하고 실현할지, 그 사이 우리 근로자들의 일터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궁금하고 기대된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이라는 5대 국정목표를 수립하고 그 아래 21개 추진전략과 140개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중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내용은 ‘안전과 통합의 사회’라는 국정목표 아래 ‘재난·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라는 추진전략, 그 안에 7개의 국정과제 중 가장 마지막인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조성 및 근로자 건강증진’ 부분이 해당된다.

이 과제는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안심 일터 조성을 통해 산업현장의 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4가지 주요추진계획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첫째, 소규모 사업장의 직·반장을 안전담당자로 지정하고 기초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역량을 강화하는 것, 둘째, 위험성평가 강화·산재예방 요율제 도입 등을 통해 자율적 재해예방활동을 활성화하는 것, 셋째, 제도개선을 통해 협력업체에 대한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는 것, 넷째, 특별관리물질을 국제수준으로 확대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경고 표시의 현장 작동성을 강화하여 직업병 예방을 강화하고 인정기준을

개선하는 것 등이다.

산업안전보건관련 국정과제와 주요추진계획이 차근차근 현장에 잘 적용되어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조성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다만 위에서 제시한 주요 추진계획들이 보건보다 안전에 치우쳐 진행되면 어찌나, 보건은 화학물질분야에만 중점을 두어 진행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작은 걱정이 스친다.

산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또한 국정과제에 제시된 안전이라는 용어가 보건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것일 거라고도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정책이라는 것이 한번 수립되면 이후 업무들은 그 내용에 충실 하느라 더욱 범위가 좁혀져 진행되는 경향을 볼 때, 다소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근로자들은 직장에서 다양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심리적 인자들에 의해 화학물질 중독, 소음, 진폐, 감염 등의 직업병과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질환 등 작업관련성질환에 이환되고 있다. 또한 직무스트레스 등의 이유로 정신질환자 발생과 자살자가 증가하고 있는 요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산업보건, 직업건강관리가 강조되어야 할 시기이다.

올 해 들어 위험성평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현장에서 위험성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살펴보면 대부분 안전위주의 위험성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위험성평가 제도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공단으로부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으면 인정유효기간 3년 동안 정부의 안전보건감독을 유예하고, 산재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산재예방 요율제를 진행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은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안전위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인정을 받아놓고 보건 분야까지 정부의 감독을 면제받기 때문이다. 이에 안전뿐 아니라 보건 분야까지 포함하는 위험성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위험성평가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는 안전 분야만 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지만 정부에서 강력히 보건을 챙기고 지침을 주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안전에 치우친 관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새 정부가 강조하는 행복한 국민, 행복한 근로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안전한 작업을 기반으로 건강한 작업, 건강한 사업장이 만들어져야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 제공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민행복시대, 행복한 근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안전한 작업환경과 함께 근로자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건강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이다.

새 정부에서는 전체 근로자들에게 양질의 직업건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건관리자가 전 업종에 배치되고,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국고지원사업이 더욱 확대되고, 모든 보건관리자들이 정규직으로 안정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